



## 제6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확충

제1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기본계획

제3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운영



## 제6장

# 남북관계 발전 기반 확충

1980년대 들어 동서화해와 공산권의 개혁·개방화 등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 및 남북관계 법률 현황

구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8.1 제정 및 시행	
남북협력기금법	1990. 8. 1 제정	1990.10.1 시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 1.13 제정	1997.7.14 시행
통일교육지원법	1999. 2. 5 제정	1999.8.6 시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5.12.29 제정	2006.6.30 시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 4.27 제정	2007.10.28 시행
거레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07. 4.27 제정 및 시행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2007. 5.25 제정	2007.8.26 시행

### 국회 동의·비준을 거쳐 발효한 남북합의서

구분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00.12.16 체결	'03.6.30 국회동의	'03.8.20 발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02.12.6 체결	'04.9.23 국회동의	'05.8.1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02.12.8 체결	'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04.12.9 국회동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03.10.12 체결	'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04.1.29 체결	'04.9.23 국회동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04.4.13 체결	'04.12.9 국회동의	
남북해운합의서	'04.5.28 체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하에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뿐만 아니라, 법령이 그 제정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법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먼저,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하는 통일고문회의를 197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회의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7년 말 현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통일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 설치되었으며,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있다. 2007년 7월 26일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고, 11월 8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1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북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긴급지원」 등 모두 6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차관(위원장)을 포함, 21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새터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를 9회 개최하여 새터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새터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정착교육, 취업, 지역사회 정착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199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며 관계부처 차관 10명과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7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

하는 7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5개 권역에 10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였다.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에서 합의사항 이행단계 이후까지 범 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유관부처 총괄협의 체인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통일부장관) 및 사무처(처장:통일부차관)를 발족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회담 준비상황을 총괄·지휘하면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변화·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 하에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와 관리·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기본계획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06.6.30)과 시행규칙( '06.11.17)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남북관계발전법의 주요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남북관계발전의 기본원칙, 남북관계 성격
- 제2장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
  -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 \*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부위원 14인, 민간위원 9인(국회추천 7인, 위원장추천 2인)
- 제3장 남북회담대표 임명 등
  -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
- 부칙
  - 법률 시행전 국회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남북관계 이용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내국 관계나 국가간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임을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합의된 정신을 국내법으로도 재확인하였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의 임명 근거와 절차, 대표 권한 등을 명

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와 대북정책 추진의 합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등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 발효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요청, 기본계획 등 고시, 유관부처간 협조, 시행계획 점검 등
- 제2장 위원회 등
  - 발전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실무위원회 구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남북회담운영을 위한 협의,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공포 등
  - 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합의서의 공포 및 관리, 합의서의 효력정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05.12.29)됨에 따라, 2006년 2월 통일부내 자체 T/F를 구성하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2006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일정을 잠정 유예하였다. 2007



년 들어 「2.13 합의」로 6자회담이 진전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등 추진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재추진하였다. 2007년 3월부터 국회·정당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에는 14개 유관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검토·조정하였다.

2007년 7월 26일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1월 8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고, 11월 28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개하였다.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남북관계발전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 대북정책의 3대 원칙과 6대 추진방향 제시
  - 추진원칙: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추진방향: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제시
  - ①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평화체제 구축 ③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민족통일성 회복 ⑤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⑥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연도별 시행계획의 소요재원은 그 전년도에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게 되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

한 변화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 제3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 남북교역액 1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포괄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일부는 2007년 초부터 전문가와 경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에 입법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를 2007년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개정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간의 교역 대상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 미비사항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남북간 교역에서 소프트웨어 등 무체물의 반출·반입의 증가를 반영하여 남북한간 교역의 대상을 물품 외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한 것과 방문증명서를 수시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하고 방문기간 동안에는 별도 방북신고 없이 방북을 허용하여 북한방문자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 사

전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던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및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방문증명서, 접촉 신고, 수송장비 승인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백히 하였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략물자 대북반출 통제제도도 정비하였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대로 남북경협이 투명성 및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대북반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전략물자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규정하여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전략물자 대북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제도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물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격과 성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사업자 등 반출자의 사전

판정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사안별로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조 하에 처리하던 전략물자 사전관정을 2007년 2월 15일부터 전문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사전판정 업무를 체계화 하였다. 위탁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관련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1,896건에 달하는 사전판정 신청을 받아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관련 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규정하고 관련한 다른 내용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8월 24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전략물자 확인의무·사전판정 신청·반출승인 신청·반출승인 기준 및 절차·사후관리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북 전략물자의 특수성에 맞추어 효과적인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주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자기금예수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7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3조 7,464억원, 민간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예수금 4조 3,372억원, 운용수익금 4,098억원, 기타 수입금 272억원 등 총 8조 5,231억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에는 식량차관,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공업, 광업, 농업 등 분야별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본격화하며, 북핵문제 해결시 대북 에너지 지원 등 기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008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를 2007년도 5,000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증가한 6,500억원으로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계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0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1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80	310,000	29,406	840,486
2002	490,000	78	505,000	42,036	1,037,114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6
계	3,746,400	2,369	4,337,274	437,062	8,523,105

\* 공자기금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 2.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

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등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사회문화교류가 다원화되면서 기금사용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무상지원(경상사업)과 유상지원(융자사업)으로 대별하여 집행되고 있다. 무상지원은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2007년 한 해 동안 168개의 사업에 총 4,353억원이 집행되었다.

인적왕래지원의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6.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지원 3억원, 북한청소년축구대표팀 방한 지원 3억원, 북한태권도 시범단 초청행사 지원 1억원 등 17건 17억원을 지원하였다. 사회문화협력지원의 경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30억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지원 5억원, 고구려 벽화무덤 보존사업 지원 2억원 등 18건 6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68억원, 3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및 2차례의 남북 이산가족상봉 지원 등 269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96건 2,27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대북 비료 30만톤 지원 956억원, 대북 수해복구 지원 293억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지원 181억원 등이다.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 지원은 총 28건 1,7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333억원, 중유 5만톤 제공 245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 지원 170억원 등이다.

유상지원은 인도적 지원(융자), 교역·경협자금 대출(교역자금 대출, 경협자금대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로 구분되며, 2007년 한 해 동안 49개 사업에 총 2,805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도적 지원(융자)으로 대북 식량차관 쌀 40만톤 1,405억원이 제공되었다. 교역·경협 자금대출로 한국 전력공사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216억원 등 43건 566억원(교역자금대출 21건 83억원, 경협자금대출 22건 48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지원 대출 405억원 등 5건 834억원이 집행되었다.

##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경 상 사 업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인적왕래지원		277 (1)	253 (1)	23,686 (9)	1,142 (3)	1,056 (7)	3,786 (13)	5,289 (12)	1,698 (17)	37,185 (60)
		사회문화협력 지원	980 (3)	637 (1)	102 (1)		654 (2)	3,098 (10)	7,468 (18)	7,375 (20)	6,908 (18)	27,222 (67)
	인도적 사업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3)	2,830 (5)	1,299 (5)	2,029 (6)	2,996 (6)	3,158 (5)	13,289 (7)	9,908 (6)	26,918 (9)	63,412 (35)
		인도적 지원 사업	260,827 (13)	97,737 (9)	97,615 (25)	122,585 (30)	150,134 (36)	122,547 (46)	186,621 (52)	212,536 (60)	227,193 (96)	1,477,793 (278)
	남북 경제 협력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	4,882 (1)	14,578 (1)	89,850 (1)	36,789 (5)	76,318 (6)	76,033 (9)	204,475 (18)	152,091 (23)	172,540 (28)	827,555 (48)
		교역경험 손실보조	1,268 (1)									1,268 (1)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기반조성		1,416 (2)				62 (1)				1,478 (3)
	경상지원 합계		268,943 (21)	117,474 (20)	189,118 (34)	185,088 (52)	231,243 (55)	205,954 (80)	415,639 (108)	387,199 (121)	435,256 (168)	2,435,913 (478)
용 자 사 업	인도적사업(용자)		67,523 (1)	86,740 (1)	18,955 (1)	96,743 (1)	156,088 (2)	101,982 (1)	179,262 (2)	3,939 (1)	140,479 (1)	784,187 (6)
	남북 경제 협력 (용자)	교역경험사업 자금대출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29,311 (51)	47,910 (50)	56,631 (43)	272,668 (238)
		- 교역 자금 대출		500 (1)	1,072 (9)	390 (5)	7,933 (29)	13,677 (64)	8,259 (37)	7,327 (27)	8,288 (21)	47,446 (193)
		- 경험사업 자금대출			45,000 (1)	35,767 (3)	10,777 (2)	23,700 (12)	21,052 (14)	40,583 (23)	48,343 (22)	225,222 (45)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대출				30,582 (1)	35,965 (2)	43,974 (3)	27,520 (5)	23,065 (3)	83,369 (5)	311,998 (8)
	대북 경수로 사업	경수로사업 대출		325,936 (1)	300,284 (1)	300,883 (1)	328,745 (1)	86,984 (1)	22,678 (1)	8,883 (1)		1,374,393 (1)
	용자지원 합계		67,523 (1)	413,176 (3)	365,310 (12)	464,365 (11)	539,508 (36)	270,318 (81)	258,771 (59)	83,797 (55)	280,478 (49)	2,743,246 (253)
	총 계		336,466 (22)	530,650 (23)	554,428 (46)	649,454 (63)	770,751 (91)	476,273 (161)	674,409 (167)	470,995 (176)	715,734 (217)	5,179,160 (745)

\* 괄호 안은 기금사업 건수

###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통일부는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체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 주요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
통일부	기금운용 주무부처(관리주체)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 지원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및 지원방침 결정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기금지원업무 실무 담당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다. 2006년에는 기금 운용 심의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사회문화교류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기금사용 증빙서류 심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통일부 내에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및 집행관리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지원 결정·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2월에는 남북경협 상황변화와 기업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경협손실보조 수수료율을 인하(연



0.7%→0.5%)하고, 약정신청 기한을 폐지하였으며, 약정신청 요건을 완화(기업 신용평가 및 업력 1년이상 요건 삭제)하는 등 손실보조 제도를 개선하였다. 7 월에는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조정(44%→54%)하고, 신용 위험조정률을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현실화하는 한편, 부분보증 취급대상거래, 보증취급기관, 취급한도를 완화하여 신용취급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밖에도 기금집행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전문가 위촉은 통일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5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개 부처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97회 개최하여 모두 41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7년에는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모두 6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의 내용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기금지원」 등 사회문화교류지원 2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기금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 8건,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식량 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23건,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을 위한 기금 지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경제협력지원 24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부문 9건이었다.

##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북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경협여건을 개선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경협사무소 개소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개성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과의 사업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던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까지 중국 단둥에서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되던 「의류 위탁가공 상담회」를 2006년부터 경협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사무소가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경협사무소로 전환되었다. 이어 농수산물 교역과 전기전자분야의 사업협어들도 개성으로 전환되면서 대



남북 기업간 사업협의 모습

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경협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2007년 말까지 남북기업간 총 999회의 사업협약이 진행되었고, 사업협약과정에 남측에서는 3,096명, 북측에서는 2,646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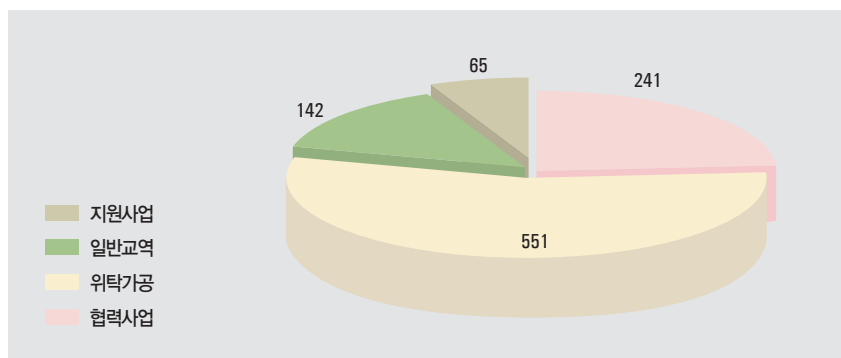
경협사무소는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 사무소간 협의를 거쳐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남북경협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해서는 남측기업의 대북사업 제안, 북측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가공 제품의 작업진도 파악 및 제품선적 확인 등 총 10,886건의 다양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측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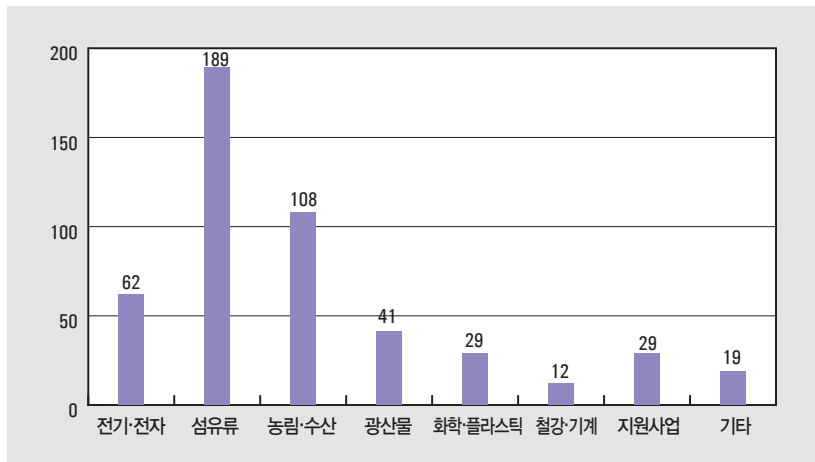
연도별 남북기업간 사업협약 현황

연 도	협약 건수	참가인원(명)		
		남 측	북 측	합 계
2005년	43	160	111	271
2006년	446	1,396	1,149	2,545
2007년	510	1,540	1,386	2,926
합계	999	3,096	2,646	5,742

사업형태별 사업협약 건수( '05.10~ '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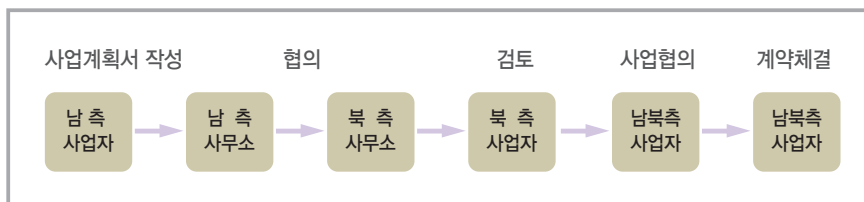


사업분야별 사업협의 건수



남측기업이 신규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북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북측의 사업추진 의향을 경험사무소를 통해 타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남측기업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문건을 팩스 등을 통해 남측사무소로 전달하면, 남측사무소는 북측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경험사무소를 통한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



또한 2006년 5월 4일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종래 남측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던 견본을 개성을 통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견본을 육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송달은 물론 송달비용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말 현재 167개의 남측기업이 총 676건의 건문을 북측과 교환하였다.

나아가 경협사무소에서 남북기업 실무자간 활발한 기술협의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경협분야를 확대, 다변화시켰다.

둘째,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의류, 농산물,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관심있는 남측기업을 경협사무소로 초청, 북측 관계자가 남측과의 경협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교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남북경협 관계자가 함께 중국 및 베트남지역 산업현장을 시찰하였으며, 5월과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상품전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농산물 교역설명회



남북경협 관계자 상해시 포동구청 방문, 포동 개발현황 청취

또한 2007년 6월에는 경협사무소에서 남북 경제단체간 교류행사를 통해 그간 개별기업 차원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을 경제 단체 및 협회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특히 신규로 대북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경협사례발표회에 수시로 초청하여 신규기업들이 대북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다.

셋째, 민간기업의 사업협의를 당국간 회담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협사무소 신축청사(연건평 4,498㎡)가 2007년 12월 21일 완공되었다. 신축청사는 회담장, IT 기술협의실, 봉제 기술협의실, 면담실, 상품전시관, 교육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국간 회담은 물론, 그동안 사무공간 부족에서 오던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일자	주요 행사명
4.11	농산물 교역설명회 개최
5.14~18	남북 경험관계자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공동 참관
5.15~6.7	2007년 추동북 위탁가공 상담회 개최
5.22	전기전자분야 교역설명회 개최
6.19~28	남북 경험관계자 중국 및 베트남 공동 해외출장
10.8~11	남북 경험관계자 가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공동 참관
11.15~12.7	2008 춘하북 위탁가공 상담회 개최
12.21	경협사무소 청사 준공식